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4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(주)국민은행

2. 조치내용

- (금감원 원안)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,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,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및 「은행법」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(주)국민은행에 과태료 36,000,000원과 과징금 238,519,873원을 부과하고, 신당동지점 및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* 2.6개월 처분 조치

* 정지대상 업무: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)

- (수정의결)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신당동지점 및 우장산역 종합금융센터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

제재대상	원안	수정안
(주)국민은행	과태료 36,000,000원 부과 과징금 238,519,873원 ¹⁾ 부과	과태료 36,000,000원 부과 과징금 330,366,991원 ²⁾ 부과
신당동지점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2.6개월	과징금 부과(60,105,925원)
우장산역 종합금융센터	업무의 일부정지 ³⁾ 2.6개월	과징금 부과(31,741,193원)

- 1) 국민은행 13개 영업소가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
- 2)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신당동지점,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를 포함한 국민은행 15개 영업소가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받는 과징금 합계액
- 3) 정지대상 업무: 외국환 지급 신규 지급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) 외국환거래법 위반

(1)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6조 제3호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5-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 제1항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- (주)국민은행 화정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.8.4.~2022.6.14. 기간 중 거주자인 ◇◇◇ 등 3개사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(4건, 미화 1,678,850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
- ◇◇◇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

(2)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6조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5-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 제1항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- (주)국민은행 화정지점은 2021.10.5. 거주자인 ◇◇◇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(3건, 미화 2,017,000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
- ◇◇◇가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

(3)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“증빙서류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- (주)국민은행 화정지점 등 13개 영업소는 2021.1.19.~2022.7.11. 기간 중 ○○○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(477건, 미화 323,336,235불)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,
-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,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,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

2) 은행법 위반
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,
- (주)국민은행 화정지점은 2021.2.4.~2022.1.11. 기간 중 ○○○ 및 □□□(♠♠♠♠♠♠)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

3) 수정심의 사유

- 위반행위의 양태·위반규모의 중대성 등의 관점에서 「외국환거래법」 위반에 대한 기존 제재 선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,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만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6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(업무상의 의무) 제1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제1항 제5호의2, 제7호, 제5항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2조의2(과징금) 제1항, 제2항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제4호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, <별표2>
-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 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, <별표3>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제1항, 제2항, 제4항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제1항
- 「은행법」 제34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4호, 제2항
- 「은행법」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5호의2
- 「은행법시행령」 제20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) 제5호
- 「은행법시행령」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4>
-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2항 제2호